대만 / 해상풍력

대만 해상풍력 어업보상 기준에서 읽는 주민 협의 절차

대만의 어업보상 기준은 개발사업자와 어회(어업인 단체)가 보상금을 논의한 뒤 어떤 기록을 남기고, 합의가 어려울 때 누가 결정하는지 정한다. 국내 지자체가 참고할 대목은 협의 당사자의 범위와 미합의 쟁점을 다루는 방식이다.

대만 기준 제4항의 협의 절차

협의와 기록	개발사업자와 어회는 어업보상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. 필요하면 대만 경제부에 회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.
세 차례 협의 후	세 차례 협의하고도 합의하지 못하면 회의록을 경제부에 공문으로 보낸다. 경제부는 이 협의 기록을 농업부에 전달한다.
후속 결정	농업부가 경제부와 전문가·학자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, 그 회의에서 결정한다.

국내 지자체가 사업 초기에 물어볼 질문

01 어업인 단체가 대변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, 그 밖의 주민이나 해역 이용자의 의견은 어떤 경로로 들을 것인가?

02 협의 때 나온 제안, 이견, 다음 회의에서 확인할 자료를 누가 기록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?

03 의견 차이가 계속되면 누가 어떤 근거로 쟁점을 검토하며, 그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

제4항의 적용 대상은 개발사업자와 어회의 어업보상금 협의다. 위 질문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별도로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. 국내 사업의 절차와 기관별 권한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국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.

공식 원문 보기 대만 농업부 어업서 「해상풍력발전소 어업보상 기준」 제4항
2024년 3월 22일 개정·시행 · 대만 농업부 문서번호 農漁字第1130207917A號
AI 도구로 이 연구노트의 발행 표기를 편집했습니다.